



‘청년 10만명’에게 ‘새로운 출발선’ 약속 - 「청년뉴딜 추진방안」 발표 -

-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신설
- 실무도 배우면서 경력도 쌓는 공공·민간 분야 일경험 2.3만명 제공
- 상담부터 취업까지, 사회·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1.1만명 제공
- 고용지원사업 재설계 통해 4.4만명의 청년들에게 원활한 구직활동·취업 지원

정부는 4.29일(수) 15:0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양호한 모습이나, 올해 1/4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이고, 구직·실업·쉬었음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미취업 인구는 171만명에 이르고 있다.

* 15~29세 고용률(%): ('20)42.2 ('21)44.2 ('22)46.6 ('23)46.5 ('24)46.1 (**'25)45.0 ('26.1/4)43.5**

** 20~30대 미취업자('26.1/4, 만명): (실업자)44.5 (쉬었음)72.4 (취준생)53.6 <2030 인구의 14%>

청년 고용지표 부진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 작용한 결과이다. ① AI 등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② 세대 간 구직경쟁 심화, ③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으로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삼중고’는 개인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와 사회 차원의 총체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2030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청년들이 자신의 비전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①도약, ②경험, ③회복이라는 세 가지 트랙을 제시하고, 원활한 구직활동과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④정책 인프라도 고도화하였다.

【 ① 도약 : 민간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1.9만명) 】

첫째,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청년 1.9만명에게 민간기업·대학 등에서 검증된 우수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채용주체인 민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콘텐츠 등 청년선호 분야의 직무훈련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심리·진로 상담, 직장적응(온보딩) 등 기업의 자율훈련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실업 등 취업애로청년을 우대 선발하는 한편, 비수도권에서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들에게는 훈련비·참여수당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재학생들에게만 제공되던 대학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비재학생 구직청년 4천명에게도 제공한다. 다양한 수요를 감안하여 첨단인재형(AI·반도체 등 8개 분야)와 실전인재형(인문·사회, 예체능 등), 2개 유형을 개설하고, 커리큘럼도 비전공자(예: AI 활용 등 초급과정)부터 전공자(예: 자격증 연계과정)까지 수준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학교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공교육 외에도 금융·법률 등 생활문해력 향상,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적성검사 기반 경력설계, 팀·동아리 활동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되어 온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디지털트레이닝)도 5천명 추가 확대한다.

【 ② 경험 : 실무 중심으로 경력형성의 출발선 제공 (2.3만명) 】

둘째, 청년들이 취업할 때 가장 필요로 하면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2.3만개 확대하고, 청년뉴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을 통합 관리하여 청년들이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경력 형성을 뒷받침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주요 국책과제 수행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공공서비스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기 위한 실태 확인원 9,500명과 농지투기 근절, 농지 소유·이용 현황 파악 등 DB 구축 등을 위한 농지전수조사 인력 4천명을 신규 채용한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2,500명의 청년들이 돌봄·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일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보다 3,000명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관광·콘텐츠·문화예술, 디지털 등 청년 선호분야의 취업연계 과정을 신설·확대하고, 기존의 민간 일경험 사업도 현장수요가 높은 인턴형·ESG 지원형 중심으로 1,500명 늘린다.

아울러, 이번 청년뉴딜 사업 참여 이력이 취업시장에서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고용 24)을 통해 통합 관리·발급한다.

【 ③ 회복 : 사회·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 (1.1만명) 】

셋째, 잠시 멈춰 선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일터로의 재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담→일상회복→직업훈련→취업」까지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1.1만개 확대한다.

우선, 청년들에게 수준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청년 친화공간인 청년카페를 통해 일상·교류는 물론 취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인원을 1천명 늘린다. 이러한 공공부문 프로그램 외에도 민간의 우수 회복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찾아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유도하여 다양한 서비스까지 연계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① 발굴·다가가기 단계에서는 청년 DB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청년에게 다양한 생활·취업 정보를 알림톡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② 신청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고용센터나 대학일자리+센터 외에 청년지원센터도 게이트웨이(상담창구)로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③ 서비스 단계에서는 어떤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① 학부모지원센터, 가족센터를 통한 부모·가족관계 교육, ② 경제캠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등 경제·금융 교육 등 청년들의 원활한 가정·사회 생활을 위한 교육 기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④ 인프라 : 원활하게 구직활동·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4.4만명) 】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원활한 구직활동과 취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도 재설계·고도화한다. 특히, 취업경험이 없거나 비수도권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청년특화트랙(K-YouthGuarantee)을 신설하고,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 수당(월 6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을 총 3만명 확대한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

청년 고용기업(1년간)과 장기근속 청년(2년간)에게 각각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 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1만명),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융자 지원도 확대(+4천명)하는 등 청년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아울러,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27), 문화선도산단 지속 확대 등 청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년들이 조속히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 (별첨) 「청년뉴딜 추진방안」 원문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인력경제과	책임자	과 장	김태웅	(044-215-8530)
		담당자	사무관	박성준	(044-215-8531)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윤미	(044-202-7440)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044-202-7423)
	교육부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현	(044-203-7251)
		담당자	사무관	지혜정	(044-203-7254)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책임자	과 장	우성훈	(044-203-4220)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3-4222)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	책임자	과 장	염성욱	(044-205-3211)
		담당자	사무관	이재우	(044-205-3212)
	국세청 체납분석과	책임자	과 장	유지민	(044-204-3041)
		담당자	사무관	정영순	(044-204-3052)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재훈	(02-2100-1685)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02-2100-1689)

